

## 정책과 이슈 |

## 2007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HRD 정책중심으로

### - 교육인적자원부

| 김 미 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mrk@krivet.re.kr)

교육인적자원부, “함께 가는 학습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청년층의 구직난이 계속됨에 따라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더 일찍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여 더욱 교육투자에 집중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가계와 학생, 그리고 기업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올 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업무 계획 중 정규교육과 인적자원개발(HRD)정책을 중심으로 쟁점과 주요 문제를 개관하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거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여건 개선으로 공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국민적 기대수준을 충족하는데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반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였으며, 둘째, 소득수준별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큰 차이를 보여 소득양극화의 악순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셋째, 양적으로 팽창된 고등교육 수요를 질적으로 고도화 하라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체평가에 기초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함께 가는 학습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다섯 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 전략목표는 다섯가지 분야, 즉 초중등 교육분야(교원정책 포함), 대학 및 대학원 등 고등교육분야, 인적자원개발(HRD)과 평생학습분야, 교육복지분야, 해외협력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각 분야별로 주요과제를 간략히 소개하고 쟁점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 ❖ 초중등 공교육의 내실화와 고등교육의 수월성 추구

우선 초중등교육과 대학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인

전망(Edu-safety net)을 구축하며,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의 경우 전략목표를 “1. 학교 교육력 강화로 공교육 신뢰제고”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성과목표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혁신,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교원정책혁신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영어교육혁신’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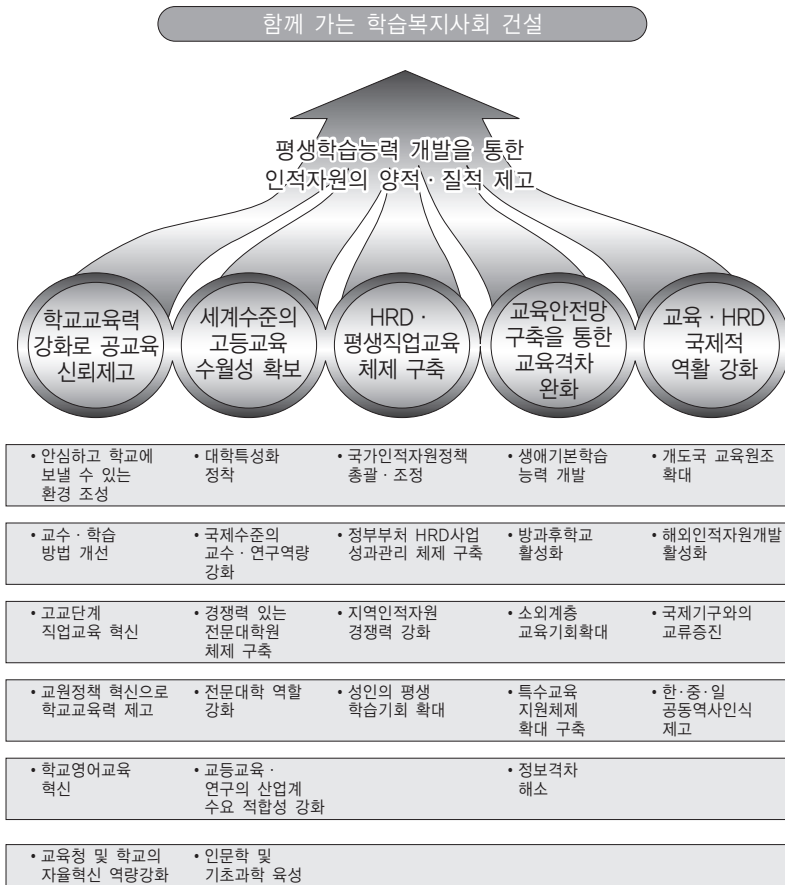
〈5개 분야별 전략목표 및 주요계획〉

1. 초중등 교육분야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의 신뢰 제고”

– 학교환경, 교수·학습법, 직업교육, 교원정책, 영어교육 등의 개선 및 혁신

그림1.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주요 업무내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2).

초·중·등 수준의 정규교육에서 주요 쟁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장공모제, 교원 승진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교원정책과 대입제도·사교육 의존도 완화와 관련된 학교교육정책이다. 학교폭력 근절이나 영어교육 혁신은 논쟁의 문제라기보다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며 실업계 고교 혁신도 특성화의 개략적인 방향이 정리된 상태이다. 교원평가제도의 경우, 도입취지에 대하여는 교육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실행에 앞서 교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 필요, 교육재정 증대와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 등이 선행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주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7. 2)이 있다. 향후 제도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논쟁과 대립이 예상된다. 학교교육정책은 2006년에 시도된 사교육비경감대책에 이어 “2007년 상반기에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이나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조건에 대하여, 교육계 내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육부가 장기 전략 수준의 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지위나 소득의 획득과정에서 ‘학력에 의한 격차’를 넘어서 ‘학벌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이나 혜택’이 작용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인식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요컨대 대입이나 사교육 문제는 교육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제도와 행태와 관련된 것인바, 그 해결책도 교육계를 넘어서 좀 더 범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모색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두번째로 고등교육에서는 전략목표를 “2. 세계수준의 고등교육 수월성 확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개혁지원을 통한 대학특성화, 교수 및 대학원생 연구지원을 통한 연구역량 제고,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전환, 인문학 육성토대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과거 엘리트 교육에서 보편화한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초점이 교육서비스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별 특성화 추구, 정보 공시제를 통한 경쟁촉진 등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BK21사업이나 학사 질관리 체제구축 등 교육의 품질관리정책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심하며, 대량교육체제에 머물고 있으며, 평생교육보다는 학령기 학생 위주의 체제로 되어 있다”고 한다(백성준 외, 2006). 교육에 있어 정부역할에 대한 한 차원 높은

## 2. 고등교육분야

“고등교육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세계적 수준으로의 도약”

- 대학특성화, 연구지원확대, 전문대학원제 도입 등

수준의 검토를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할 것인 바 이에 대응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유형과 기능을 분화할 것, 고등교육기관의 학과와 프로그램을 산업계의 인력수요구조 변화에 맞게 변화시키는 정책 및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정책,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 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 ❖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연계조정 역할

세번째로 인적자원개발(HRD) 및 평생학습과 관련한 전략목표는 “3. HRD와 평생직업교육의 체제 구축”으로 ‘국가 인적자원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정부부처 HRD사업의 성과 관리 체제를 구축, 지역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성인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세부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가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정책적 효과성과 중복 우려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부처의 HRD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조사·분석·평가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에 연계·조정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시도로 인정되어 왔다(제2차 NHRD 기본계획). 그러나 2007년 업무보고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처별 HRD사업의 실질적인 총괄·조정·평가에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를 ‘혁신본부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범부처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HRD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은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더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교육인적자원부 뿐 아니라 노동부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제도 등을 통해 성인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군복무중 학점취득, 유아-중고령 여성 협력망 구축, WISE(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이다. 생애단계별로 평생교육의 체제를 구축하기 보다는 부분적이며 위원회 구성 수준의 매우 소극적인 접근이다. 이에 비해 노동부의 정책은 재직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금을 통한 직업훈련과 개인학습구좌제가 중심이 되어 주무부처로서 기능하고 있다. OECD(2005년)가 측정한 주요 국가들의 평생학습참여율은 44.5%(1994~1998년 기준), 한국 성

### 3.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분야 “HRD 총괄 및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 국가 HRD정책 관리 체제 구축, 지역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성인의 평생학습기회 확대

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3.4%(2004년)이다. 인적자원개발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정책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이병희 외, 2006). 첫째,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있어 비중을 현재 학교교육에 치중한 것에서 노동시장에서의 HRD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시장과 연계한 교육체제의 개혁, 즉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을 초·중등교육보다는 노동시장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 ❖ 교육안전망 구축으로 교육격차 완화

### 4. 교육복지분야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 생애기본학습능력개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소외계층 교육 기회확대 등


### 5. 해외협력분야

“교육·HRD 분야의 국제적 역할 강화”

- 개도국 교육 원조 확대, 국제 기구와 교류 증진 등

네번째로 교육복지분야는 ‘4.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라는 전략 목표 하에 ‘생애기본학습능력개발,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 소외계층 교육기회확대, 특수교육지원체제 확대, 정보격차해소’를 세부계획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 저소득층 유아와 자녀의 교육지원, 방과 후 학교제도,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도서관 여건 개선, 정보화(IT) 교육기회 지원 확대 등이 주목된다.

최근 연구(유한구, 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등교육단계에서 사회계층 요인, 즉 학부모의 직업과 학력수준, 가구 수입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사회계층 효과)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재 정부는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사회계층의 효과를 대체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정책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계층 효과를 보완하는 학교교육의 기능을 살리는 방안에 대하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기적 검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부족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보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번째로 “5. 교육·HRD분야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교육원조 확대, 해외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국제기구와의 교류증진, 한중일 공동역사 인식제고’를 세부과제로 계획하고 있다. 

###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7.2). '2007년 주요업무계획'.

백성준 외(2006). 『고등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한구(2006).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병희 외(2006). 『평생학습과 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7.2).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제시하라』, 보도자료.